

# 세계 인권 현황

## 보고서

2024년 4월



AMNESTY  
INTERNATIONAL



#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개국 1,000만 명 이상의 지지자, 회원, 활동가로 구성되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불편부당합니다. 우리는 자주권, 영토 분쟁, 또는 자결권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또는 법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점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 세계 인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국 영토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독립 국가로 구분하여 기록했습니다.

2024 년 국제앰네스티  
발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  
국로 2 길 21 대왕빌딩 6  
층  
Copyright Amnesty  
International 2024  
Index: POL  
10/7200/2024  
ISBN:  
978-0-86210-509-9  
원어: 영어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본 문서의 내용은 크리에  
이티브커먼스(저작자표시  
4.0 국제)라이선스로 허  
용됩니다.

[https://  
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nd/  
4.0/legalcod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  
스티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세요: [amnesty.or.kr](http://amnesty.or.kr)

이 보고서는 2023년 국  
가 및 지역 차원의 주요  
인권 발전 상황을 기록하  
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국제앰  
네스티가 2023년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가  
나 영토에 대한 항목이 포  
함됩니다.

이 보고서 내에 특정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 기간 국제앰네  
스티가 우려하는 인권 침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  
다. 또한, 각 국가별 인권  
현황 내용의 길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앰네스  
티의 우려 정도를 비교하  
는 근거로 볼 수 없습니  
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선고 및 집행에 관한 별도  
의 연례 사형 보고서를 발  
간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  
에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지는 않  
습니다.

세계인권현황

보고서





# 목차

서문 6

글로벌 인권 실태 분석 10

지역별 인권 현황 개요 21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개요 22

국가별 인권 현황 31

대한민국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4

# 서문

필자가 인권 상황에 관해 1980년대의 과학 픽션 영화 〈백투더퓨처〉를 언급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세계는 빅테크와 규제받지 않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포획된 미래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진하면서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1948년의 약속 이전으로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 ‘권위주의적’ 관행이 증가하다

2023년 정치학 연구소 바이뎀(V-Dem)은 민주주의 체제(법치, 입법부 및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의 존중이 보장되는 국가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에 속하는 인구수가 198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 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기 전,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냉전이 종식되기 전을 말한다.

새로운 시대는 너무나 짧았고, 이제 사실상 끝나 버렸다. 그 증거는 2023년 더욱 늘어났다. ‘권위주의적’ 관행과 사고방식이 다수의 정부 및 사회에 확산하였다. 북반구와 남반구, 동양과 서양을 가릴 것 없이 권위주의적 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약화시켰다.

혐오와 두려움에 부리를 둔 공적 내러티브는 시민 공간을 축소시키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을 악마화하며 특히 난민, 이주민, 인종화된 소수 집단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반발은 2023년 심화되었고, 지난 20년간 이룩한 많은 성과가 위협을 받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혹은 소녀가 존재 자체로 사실상 범죄자가 되었다. 2023년 탈레반은 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십 건의 공식 명령을 통과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이란 당국은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 시위를 계속해서 잔인하게 탄압했고,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바이러스’, ‘사회적 병폐’, ‘무질서’라 지칭하며 혐오로 점철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15개 주에서 임신중지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적인 예외만을 허용하면서 흑인과 기타 인종화된 소수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폴란드에서는 법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사망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미국의 사회 및 정치 지도자들은 트랜스젠더를 억압하는 내러티브, 정책, 규제를 확산시켰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지만, 세계은행의 표현에 따르면 2023년은 ‘불평등의 해’였다. 영국, 헝가리, 인도 등 다수의 상이한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 옹호자는 활동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공격 대상이 되었

다. 기후 활동가는 화석 연료 생산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었다. 중동 지역에서 정부의 경제 운용을 비판한 사람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조합은 침묵을 강요받고 자의적으로 구금되었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부패와 맞서 싸운 활동가도 마찬가지였다.

## 1948년 이전으로?

2023년에 타임머신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사실 1985년보다 훨씬 전이었다. 1948년에 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 지옥으로 우리를 추락시킨 것이다. 당시 세계는 민간인 사망자 약 5,500만 명을 낳은 세계 대전과, 유대인 600만 명과 기타 수백만 명을 절멸시킨 대량 학살을 경험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3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과 법적 가르침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끔찍한 범죄(대다수가 이스라엘 민간인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고, 수천 명이 다치고, 245명이 인질로 잡힌) 이후 이스라엘은 보복을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고, 이는 집단 처벌을 위한 작전이 되었다. 민간인과 민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고의적이며 무차별적인 폭격, 인도적 지원 거부, 의도적인 기아 사태가 이 작전의 특징이었다.

2023년 말까지 가자 지구에 대한 끊임없는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만 1,600명(대부분 민간인)이 살해되었고, 이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종 상태로 폭격의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 지구의 민간 사회 기반 시설 상당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팔레스타인인 190만 명가량은 충분한 식량, 물, 주거, 위생, 의료 지원 없이 국내 실항민이 되었다.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으로 산다는 것은 1948년 팔레스타인인 75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당한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을 의미)’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으로의 추락을 뜻한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가자 지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설계한 많은 이들의 완전한 도덕적 실패를 상징한다. 그들은 보편성, 공통의 인간성, 세계 대전의 참상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를 수호하지 못했다. 유엔 헌장, 제네바 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 국제인권법 등에 규정된 원칙들은 모욕당했다.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유럽 각국의 일부 리더와 유럽연합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폭력을 비판하지 않은 이들, 휴전 요구를 거부한 이들 또한 그렇다.

이들의 행위는 국제앰네스티가 오랫동안 비판해 온 이중 잣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힘 있는 행위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1948년 수립된 규칙 기반 질서 전체를 위태롭게 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공통의 인간성과 보편성이라

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이로써 세계가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통해 곧바로 드러났다. 이 침략 전쟁은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수없이 많은 사람에 대한 살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와 수출 시설 등 민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파괴로 유엔 헌장 위반과 국제 법치주의 훼손을 드러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 역시 미얀마 군부와 그들의 불법적 공습을 비호하고, 자국 내에서 체포 및 고문 관행을 지속하고, 위구르족 등에 대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

2023년, 챗GPT-4와 기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출시되면서 우리는 더욱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떠밀려갔다. 만약 우리가 2023년에 발생한 기술 관련 인권 침해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실로 섬뜩할 것이다.

기술은 인종 차별적 정책을 영속화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만연하게 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피해를 무시하기도 하고, 국소적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이는 에티오피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미얀마, 수단 같은 무력 분쟁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팔레스타인인 및 유대인 공동체 모두에 대한 온라인 선동과 기타 해로운 콘텐츠가 우려스러운 정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무슬림 및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점점 많은 국가가 대중 시위, 스포츠 행사, 그리고 특히 이주민과 난민 등 소외된 집단 전반에 대한 치안 유지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채택했다. 이주 관리와 국경 통제를 위해서 국경 외부화(border externalization) 기술,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생체 인식,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 시스템 등 인권 침해적 기술이 활용되었다.

스파이웨어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오랜 기간 쌓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파이웨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2023년 국제앰네스티는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세르비아에서 언론인과 시민 사회 활동가를 상대로 스파이웨어 ‘폐가수스’가 사용되었음을 포착했다. 한편, 유럽연합 내에서 개발된 스파이웨어가 전 세계 각국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럽 의회는 스파이웨어 산업의 인권 침해 억제 조치의 부족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2023년 11월 채택했다.

하지만 기술의 ‘무법자’들과 이들의 ‘난폭한’ 기술이 ‘디지털 서부 개척 시대’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는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질 2024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미래의 전조라 할 수 있다.

## 국제적 연대

2023년의 인권 후퇴에 모두가 눈감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후퇴에 항의하며 전례 없는 국제 연대를 보여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전 세계에서 수백 건의 시위를 촉발했다. 수백만 명이 민간이 사망에 항의하고, 인질 석방을 호소하고, 휴전을 요구했다.

유엔 사무총장, 각종 유엔 기구의 수장들,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이스라엘 남부 및 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이스라엘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하는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섰다.

2023년 말 유엔 총회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여러 건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행한 행위가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제소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립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심성을 역설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조세 체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와 저소득 국가의 재정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11월 유엔 총회는 고소득 국가의 바람과 달리 아프리카 지역 그룹의 제안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유엔 조세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국제 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년 많은 사람이 세계를 1985년, 심지어 1948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투쟁하고 저항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미래로 우리 모두를 끌고 가려는 세력에 맞서 행진하고 항의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역시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함께 만들었다.

필자는 2048년, 나아가 3048년에 외교관과 활동가가 지난해를 돌아볼 때, 전 세계의 정말 많은 선한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을 알기를 바란다. 공통의 인간성을 위해, 과감히 일어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 글로벌 인권 실태 분석

2023년 인권 침해는 광범위하게 확산하였다. 국가 및 무장 단체 간 무력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공격과 살해가 빈번히 자행되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시위 참가자에 대해 불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고, 인권 옹호자를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경우에 따라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많은 국가는 경제적 불의와 기후위기를 방지하는 등 식량, 건강, 교육, 건강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을 폭력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 선주민, 인종화된 소수 인종이나 종교 공동체는 뿌리 깊은 차별로 인해 소외되었고, 폭력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 침해를 겪을 위험이 커졌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일부 기여했다. 지역별 인권 현황에서는 각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추세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세계 인권 현황에서는 이처럼 부정적인 세계적 추세를 잘 보여주는 네 가지 이슈, 즉 1) 무력 분쟁 시 민간인이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상황, 2) 젠더 정의에 대한 반발의 증가, 3)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및 환경 파괴가 가장 소외된 집단에 미치는 불균형한 영향, 4)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을 포함한 신기술 및 기존 기술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이슈들이 2024년과 그 이후까지 인권에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각국은 이에 대처하고 분쟁과 위기가 새로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무력 분쟁 중 민간인에 대한 대우

국가 및 무장 단체는 무력 분쟁 중에 민간인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왔으며, 이는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차별에 일정 부분 부리를 두고 있다. 현재의 국제 체계는 때때로 인종 차별적 이중 기준과 강대국 간의 대립에 발목이 잡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거의 취하지 못했다.

## 국제인도법 위반

‘전쟁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제인도법 위반과 회피로 인해 민간인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여러 분쟁에서 정부군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주로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는 무기를 사용해 장거리 지상 및 공중 공격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택 및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일부 분쟁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 준수가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행동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속적인 전쟁 범죄로 점철되어 왔다. 러시아군은 인구가 많은 지역, 민간 에너지 및 곡물 수출 시설을 무차별 공격하고, 전쟁 포로를 고문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고, 카호프카댐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켰다. 미얀마 정부군과 그에 연계된 민병대는 민간인을 상대로 표적 공격과 무차별 공격을 자행해 2023년에만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러나 러시아 및 미얀마 정부는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

반이 보고되었음에도 조사는 커녕 대응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모두 중국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다.

수단에서는 교전 당사자인 수단군 및 신속 지원군 양측 모두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표적 공격을 자행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형 무기를 발사하는 등 국제인도법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교전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연말까지 1만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80만 명 이상은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약 140만 명은 수단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수행한 공격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 국제인도법의 핵심 규범들을 조롱해 왔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물의 대대적 파괴를 용인하면서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무시했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폭격과 지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만 1,600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분의 1은 아동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인구 밀도가 높은 난민촌과 주거 시설을 폭격해 반복적으로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비롯해 병집, 기타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고 이 과정에서 전쟁 범죄의 증거가 쌓여 갔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에 대한 대피 명령이 효과적인 경고이자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로 인해 190만 명(가자 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의 83%)에 육박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가자 지구 불법 봉쇄로 가자 주민들이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일부 이스라엘 정부 관료의 인종차별적, 비인간적 발언의 증가와 함께 집단 학살의 경고 신호였다.

한편, 하마스 및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폭격 및 지상공격 이전인 2023년 10월 7일에 이루어진 공격을 가자 지구 및 서안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랜 군사 점령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거주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살해, 인질 납치, 이스라엘을 향한 무차별 로켓 발사 등의 범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이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 피해와 파괴,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미국과 다수의 유럽 국가는 이스라엘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무기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무기들은 노골적인 인권 침해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이 러시아와 하마스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 온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심각한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과 민간인 보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이 1948년 체결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가자 지구에서 위반했다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2023년,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에서 정부군과 무장 단체들은 이와 유사하게 무력 분쟁 중 국제인도법을 무시했다. 무차별 공격과 기타 불법적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민간인들이었으며, 이러한 공격 중 일부는 전쟁 범죄에 해당했다.

젠더 기반 폭력은 이러한 무력 분쟁 중 일부의 주요 특징이었다. 더욱 광범위한 성폭력의 맥락에서 에리트레아 방위군 군인들은 15명 이상의 여성을 납치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Tigray) 지역의 한 군부대에 3개월 가까이 억류하며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2023년 1분기에만 노르키부(Nord-Kivu) 지방에서 3만 8,000건 이상의 성폭력이 보고되었다.

각국 정부는 군사 행동과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비판하는 국내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2023년 러시아는 전시 검열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무력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직후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 언론, 정치 활동가는 공격받아 왔다. 특히 여성 인권 옹호자는 큰 어려움에 마주해 왔다.<sup>1</sup>

##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차별

이러한 무력 분쟁 일부와 그에 대한 대응의 중심에는 인종 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진행 중인 무력 분쟁의 근원은 부분적으로 극단적 인종 차별, 즉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체제에 있다. 이스라엘은 이 체제에서 영토의 분절화, 분리와 통제, 토지 및 건물의 강탈,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부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다. 민족에 따른 ‘타자화’는 에티오피아, 미얀마, 수단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무력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인종 차별은 이러한 무력 분쟁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의 언어적 수사와 정책에서 차별적 이중 잣대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분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상황이 불러일으킨 반향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 많은 정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위법하게 제한했다. 2023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는 공공질서나 국가 안보에 대한 추상적 위험, 때로는 인종 차별적 고정관념을 근거로 이러한 집회를 사전에 금지했다. 미국, 서유럽, 기타 지역의 미디어와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비인간적 표현을 빈번히 사용했으며, 인종 차별적 담론을 확산시키고 무슬림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유대주의 및 반이슬람 혐오 범죄가 유럽과 미국에서 증가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 및 유대인 커뮤니티 모두에 대해 혐오 선동 등의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가 우려스러운 만큼 증가했다. 팔레스타인인과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올린 콘텐츠는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관리 대상이 되었다.<sup>2</sup>

한편, 2023년 10월 공개된 에티오피아 관련 보고서는 메타(Meta)가 페이스북에서 선동적 콘텐츠를 억제하지 않은 것이 티그라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밝혔다.<sup>3</sup>

인종 차별주의는 무력 분쟁이나 기타 위기 사태로 피난을 떠나는 이들을 대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유럽연합, 기타 유럽 국가, 미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이주 억제 및 외화 정책으로 인해 피난민은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같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대개 우호적으로 대우한 것과 대비된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2023년 5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및 소녀에게 자동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을 비롯해 무력 분쟁과 심각한 인권 침해로 피난을 떠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상시적인 통로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 국제 체계

여러 다자 기구는 무력 분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정적인 자원의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였지만, 다자 기구 내 여러 행위자는 대범하게 의지를 표명하거나 자신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일부 구성원은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주요 무력 분쟁에 대해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은 예상대로 거부권을 무기화하며 안보리의 가자 지구 휴전 촉구를 반복적으로 막았다.<sup>4</sup> 그러나 안보리는 과거 일정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던 주제에 대해서조차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2023년 7월, 안보리는 시리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메커니즘 결의안의 승인 연장에 실패했다. 안보리 산하의 '아동과 무력 분쟁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소말리아, 시리아에서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 1년 이상, 일부 사안의 경우 2년 이상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무력 분쟁의 영향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수단에 대한 인권 감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 임무를 연장했다. 그러나 그 밖의 중대한 임무는 연장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에 관한 국제 인권 전문가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Experts on Ethiopia)'는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추가적인 잔혹 행위가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해당 위원회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활동이 종료되었다. 또한 '리비아에 관한 진상 조사단(Fact-Finding Mission on Libya)' 역시 리비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일부 국가는 이처럼 중대한 임무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처음에는 이러한 임무의 승인을 지지한 국가도 반대 의견 앞에 지지를 철회했다.

다만 유엔이 생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AI 기반 알고리즘에 맡기는 자율 무기 체계의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대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2023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폭넓은 지지로 채택했다.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각국을 상대로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2026년까지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무력 분쟁 중 발생한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자신이 다룬 사건들을 이중 잣대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급했다. 검찰국은 케냐 및 우간다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고, 나이지리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발표한 바와 달리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상 범죄를 기록해 온 다수의 상황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마리아 리보바벨로바(Maria Lvova-Belova) 러시아 대통령 직속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모든 회원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 법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을 체포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조사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10월 7일 및 그 이후 발생한 사건도 포함될 것이라고 뒤늦게 발표했다.

또한 2023년 5월 '대량 학살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 범죄의 수사 와 기소에서의 국제 협력에 관한 류블랴나-헤이그 협약(The Ljubljana-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other International Crimes, 일명 상호법률지원협약)'이 채택되어 국제법상 범죄 피해자가 국가 별 법원을 통해 사법 절차에 접근할 길이 열렸다.<sup>5</sup>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는 조치를 취해 상임 이사국이 아무런 견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호법률지원협약을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민간인 보호를 포함해 무력 분쟁 중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특별 절차 제도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범죄를 조사 및 보고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기관 등 예방적 역할을 하는 유엔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 젠더 정의에 대한 반발

몇몇 국가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성, 소녀, LGBTI의 권리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었다. 여러 정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 및 LGBTI 권리를 후퇴시키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지 못했다.

### 차별 및 성과 재생산 권리

최근 몇 년간 여성 인권 옹호자와 시민 사회단체는 여성 인권과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존중에 있어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젠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몇몇 정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강화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여성과 소녀가 초등 교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유엔 사무소 및 비정부기구와 함께 일하거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란 당국은 hijab 착용을 강제하는 단속을 강화했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이들에 대해 잔인한 보복을 가했다. 2023년 프랑스 당국은 학교와 스포츠 활동에서 소위 '종교적 복장'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무슬림 여성과 소녀를 차별했다.

2023년 몇몇 국가에서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진전이 있었다. 온두라스 정부는 응급 피임약 사용 및 판매 금지 결정을 14년 만에 철회했는데, 여전히 임신중지는 금지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임신중지 범죄화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핀란드, 스페인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성과 재생산 권리가 후퇴되었다. 미국에서는 15개 주가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적인 예외만을 허용함으로써 흑인 및 인종화된 소수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2023년 폴란드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성이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당한 후 사망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더 이상 임신중지 권리가 연방 차원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자 필수적인 재생산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억제했다. 임신중지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 보건 의료 종사자 등은 낙인찍기, 신체적·언어적 공격, 협박과 위협 등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기소, 수사, 체포를 통해 죄인 취급을 받았다.<sup>6</sup>

## 젠더 기반 폭력

여성 인권 옹호자의 투쟁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조치가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럼에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2023년 일본, 북마케도니아,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을 포함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는 뿌리 깊은 젠더 기반 폭력과 그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생존자가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외시켰다. 2023년 멕시코에서는 하루에 9명꼴로 여성이 사망했다. 알제리, 튀니지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명예 살인’의 피해자가 되었다. 악습이 야기한 파괴적인 영향도 있었다. 2023년 니제르에서 강제 결혼을 피하고자 16세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시에라리온에서는 2세 여아가 여성 할례(FGM, 성기 절제) 끝에 숨졌다.

## LGBTI의 권리

몇몇 국가에서는 LGBTI 권리 보호에 있어 제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다수의 다른 국가에서는 LGBTI 권리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었다.

2023년 몇몇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정책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라트비아 당국은 시민 결합을 인정했다. 대만 당국은 동성 국제 커플 대부분에게 결혼할 권리를 인정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나미비아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근거로 이민법상 지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당국은 성별 자기 결정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62개국은 여전히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경우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것이다.<sup>7</sup> 2023년에는 LGBTI 권리를 제한하려는 법적 조치나 제안이 다수 이루어졌다. 우간다에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악질 동성애(aggrieved homosexuality)’가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가나 의회는 ‘반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는 새로운 트랜스젠더 혐오법을 도입했고, 불가리아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제도를 폐지했으며, 영국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성별 정정 개혁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인도 대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거부했다.

다수의 지역에서는 LGBTI에 대한 체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LGBTI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2023년 부룬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의 국가에서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법에 따라,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 결혼식이나 파티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체포되고 일부는 수감되었다. 중국에서는 잘 알려진 LGBTI 단체가 정부의 지속적인 LGBTI 탄압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러시아는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국제 LGBT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해 사실상 LGBTI 권리에 관한 모든 공개적 활동을 불법화했다.

다수의 지역에서는 LGBTI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가 계속되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성 결혼이 여전히 불법인 과테말라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34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레바논에서는 정부가 LGBTI에 대한 폭력을 부채질했다. 이라크 당국은 미디어에 ‘동성애’ 대신 ‘성적 이탈(sexual devi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젠더 정의 및 이에 연대하는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고 생존자의 장기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LGBTI를 차별하는 법률 및 정책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경제 위기 및 기후변화의 영향

경제 위기, 기후변화, 환경 파괴는 소외된 집단에 가장 큰 피해를 줬다. 이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 역시 반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결합하면서 일련의 경제 위기가 촉발되었다. 41억 명의 인구가 의료 외에 어떠한 사회 보장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는 식량 및 연료 공급의 심각한 불안정을 포함해 인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3년 반환점을 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2023년 4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약 140개의 목표치 중에서 제 6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절대 빈곤을 종식하자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 5억 7,500만 명이 절대 빈곤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이미 부채 위기가 진행 중인 국가의 국가 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23년 12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저소득 국가 중 약 60%는 부채 위기를 겪고 있거나 부채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큰 상태다. 그보다 더 많은 국가는 인권 보장 대신 점점 증가하는 부채 상환액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심각한 부채 위기가 진행 중인 국가로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튀니지, 우크라이나, 잠비아 등이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은 2022년 최고점 대비 일부 하락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계속 상승했다. 2023년의 각기 다른 시기에 시에라리온 인구의 78%는 식량 부족을 겪었고, 남수단 인구의 46%는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으며, 소말리아 인구 500만 명은 식량 위기를 겪은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2월 중순경 가자 지구 인구의 93%는 기아 상태에 처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임신부 및 수유부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 실현을 더욱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조세 거버넌스와 기타 경제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저소득 국가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한 세계 조세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진전이 있었다. 유엔 총회는 ‘국제 조세 협력의 효과성과 포용성에 관한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Effective and Inclusive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의 2단계 협상 프로세스 개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이지리아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영국, 미국 등 다수의 고소득 국가의 반대에도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sup>8</sup>

###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 기상 이변과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피해를 주었지만, 저소득 국가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정부와 기업은 이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고, 심각한 환경 파괴를 방지하지도 못했다.

각국 정부, 특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법적 원칙에 따라 강한 탄소 감축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역사적 다배출국과 현재의 다배출국 정부들은 화석 연료와 기타 기후 변화 요인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는 공적 재원 등을 활용해 화석 연료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확장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선정된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총회 의장이 CEO로 재직 중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가 화석 연료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28차 총회 합의문에는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 away)’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역대 당사국 총회의 결정 중 화석 연료가 최초로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은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 및 국가의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허점이 남아 있어, 실제 필요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sup>9</sup> 한편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상 재난 등의 피해를 본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손실과 보상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는 28차 총회에서 7억 달러가 약정되었는데, 이는 기금의 운용을 간신히 시작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sup>10</sup>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사이프러스 및 아일랜드 법원, 유럽인권재판소 등 몇몇 국가 법원과 지역 법원은 ‘기후변화 또는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불충분’에 대해 집단 또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구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화석 연료 기업에 묻거나 추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3월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함으로써 바누아투와 기타 태평양 도서국들의 입장을 지지했다.<sup>11</sup>

#### 소외된 이들이 입은 불균형적 영향

선주민을 포함하여 교차 차별을 겪는 인종화된 소수 집단은 경제 위기, 기후변화, 환경 파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는 현재 및 과거의 구조적, 직접적 차별이 누적된 효과를 포함해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소외 집단은 경우에 따라 의약품과 식수, 충분한 식량, 전기 등 필수재를 이용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2023년 5월 미얀마에서는 사이클론 모카(Mocha)로 인해 로힝야족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는 2012년 강제 이주 이후 계속된 열악한 주거 환경이 상당 부분 원인이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으로 특히 빈곤층과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미주 지역과 아시아 등에서는 선주민과 기타 소외 집단이 대규모 채굴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 인권 옹호자

경제 위기, 기후변화, 환경 파괴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는 계속해서 정부 및 비국가 행위자의 표적이 되었다.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집트부터 한국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다.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에서는 국가 자원 부족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부패 문제에 맞서는 인권 옹호자들이 협박과 구금, 살해의 대상이 되었다.<sup>12</sup>

이들 외에도 많은 인권 옹호자가 반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일환으로 박해, 협박, 살해의 대상이 되었다. 2023년 온두라스에서는 과피놀(Guapinol) 지역 주민 3명이 살해되

었다.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 광산 업체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던 이들이었다. 또한 방글라데시, 중국, 쿠바, 헝가리, 인도, 요르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영국 등의 인권 옹호자도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제가 2023년 시행됨에 따라 피해를 보았다.

평화적인 시민불복종 행동에 나선 선주민, 기후정의 활동가, 환경 인권 옹호자들 또한 대규모 체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많은 활동가들처럼 범죄화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물리적 사용의 대상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시위 참가자에게 운동에너지 충격탄(고무탄과 플라스틱탄 등)을 비롯한 기타 발사 무기들이 사용되면서 영구적 장애를 입은 이들을 포함해 부상자 수천 명, 사망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sup>13</sup> 경찰의 군사화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저살상무기(less-lethal weapon) 주요 제조사들은 위법하게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각국 보안군에 무책임하게 제품을 공급했다.<sup>14</sup>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통해 경찰 치안 장비 교역을 통제하지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2023년 유엔 인권최고대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모두 고문없는무역조약(Torture-Free Trade Treaty)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각국 정부와 국제 금융 기관들은 막대한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인권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국가들의 부채 탕감을 포함해 부채 경감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해 제안된 세계사회보장기금(Global Fund for Social Protection)을 창설해야 한다.<sup>15</sup> 각국 정부는 유엔 조세 협약 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화석 연료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공평한 단계적 탈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 고문없는무역조약(UN Torture-Free Trade Treaty)'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옹호자를 위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 신기술 및 기존 기술의 위험

최근 몇 달간 생성형 AI의 등장이 뉴스 1면을 채웠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 그리고 기존 기술이 특히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의 인권에 가하는 위험이 잘 드러났다. 각국은 국제적인 스파이웨어 거래와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기술 기업의 감시 기반 사업 모델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AI의 리스크

2023년 텍스트를 합성 및 생성할 수 있는 챗GPT-4가 공개되면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사람들의 노동 환경,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 경험을 바꿀 것인지가 주목을 받았다. 생성형 AI는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없다면 복지, 교육, 고용에 대한 접근, 노동권, 사생활, 온라인 안전 등의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다. 인종 불평등을 포함한 불평등의 심화, 감시 강화, 혐오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 등이 그러한 리스크의 예다.<sup>16</sup>

기존의 AI 시스템들은 다른 기술들과 함께 이미 국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치안, 안보, 이주 등의 분야에서 불평등을 확대하고 소외된 집단에 피해를 가중해 왔다.<sup>17</sup> 세르비아에서는 세계은행의 재원 제공으로 반자동화 사회 복지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많게는 수천 명

이 필수적인 사회 부조 수급 자격을 잃었고 집시와 장애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스라엘의 안면 인식 기술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유지에 기여했다. 2023년 뉴욕시 경찰국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감시했는지 공개했는데, 뉴욕 시의회가 이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한편 신기술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들은 인권 존중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8</sup>

### 국제적 스파이웨어 거래

각국은 국제적 스파이웨어 거래를 통제하지 못했다. 2023년 국제엠네스티 조사는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세르비아에서 언론인 및 시민 사회를 상대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Pegasus)'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프레데터(Predator)' 파일에 대한 유럽탐사보도협력체(European Investigative Collaborations)와 국제엠네스티의 대규모 협력 조사에서는 '유럽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규제 대상인' 스파이웨어들이 전 세계 각국에 자유롭게 판매되었음이 밝혀졌다.<sup>19</sup> 이러한 폭로 이후 유럽 의회는 2023년 11월 스파이웨어 업계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불충분한 조치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2023년 3월 11개국 이 스파이웨어가 인권에 미치는 위협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포함해 몇몇 정책 당국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 빅테크의 인권 침해

빅테크의 감시 기반 사업 모델의 폐해는 무력 분쟁의 맥락뿐만 아니라 아동 및 기타 청년층의 권리 침해라는 측면에서 2023년 다시 한번 극명히 드러났다. 틱톡의 콘텐츠 추천시스템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수집 관행은 이미 불거진 정신 건강 악화 문제를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우울한 콘텐츠,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증폭시켜 젊은 이용자들을 위협하게 했다.<sup>20</sup> 또한 X(구 트위터)에서는 LGBTI에 대한 혐오 선동이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다.<sup>21</sup> 정치적 허위·조작 정보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2024년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선거가 치러질 예정임을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한 리스크다. 각국의 억압적 정치 세력은 소셜 미디어를 무기화해 소수자를 공격하고 커뮤니티 간 서로 반목하게 함으로써 선거 승리를 도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참여도(engagement)'와 이윤을 우선시하는 빅테크의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과 사업 모델에 의해 더욱 촉진 및 악화되었다. 이러한 리스크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규제 당국, 그리고 구제 수단을 찾는 피해자는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7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Meta)의 감시 기반 사업 모델에 대해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직후 노르웨이 당국은 메타에 노르웨이 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과 추정 위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연합 시민사회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인권 존중을 추구하는 역사적 규제인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철저한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이 2023년 합의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최종 문구는 피해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 및 이민 당국의 감시 활동 확장과 정당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각국 정부는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스파이웨어와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의 리스크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감시 기반 사업 모델의 폐해에 대처함으로써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

- 
1. 분쟁 중, 분쟁 및 위기 이후 상황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2023. 6. 5.
  2. 세계: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온라인 혐오 및 검열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2023. 10. 27.
  3. 에티오피아: 메타의 대응 부재가 북부 지역 분쟁 중 티그라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기여했다, 2023. 10. 31.
  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휴전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통을 받는 민간인들을 차갑게 무시한 행위다, 2023. 12. 8.
  5. 국제 사법의 날: 로마협약 활용과 국제사법체제 강화, 2023. 7. 17.
  6. 멈출 수 없는 운동: 임신중지 권리 옹호자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세계가 촉구하다, 2023. 11. 24.
  7. 식민주의와 성적 지향-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젠더 정체성에 따른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의견서, 2023. 6. 15.
  8. 세계: 국제적 조세 협력에 대한 찬성표는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 2023. 11. 22.
  9. 세계: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기로 한 28차 당사국 총회 합의는 선례를 만들었으나 인권 보장에는 부족하다, 2023. 12. 31.
  10. 세계: 손실과 보상 기금에 대한 28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최초 약정액은 필요에 크게 못 미친다, 2023. 11. 30.
  11. 세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정의 증진을 요청해 태평양 도서국을 지지하다, 2023. 3. 29.
  12. 부패에 맞선 싸움이 위기에 처하다: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의 반부패 인권 옹호자 탄압, 2023. 7. 11.
  13. '내 눈이 터졌다': 전 세계의 운동에너지 충격탄 사용 실태, 2023. 3. 14.
  14. 탄압 산업, 2023. 10. 11.
  15. 오르는 물가, 커지는 시위: 보편적 사회 보장의 논리, 2023. 5. 10.; 말보다 행동이다: 세계은행은 보편적 사회 보장을 추진하라, 2023. 10. 10.
  16. 세계: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들은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한다, 2023. 6. 14.
  17. 디지털 격차: 기술, 불평등, 인권, 2023. 10. 2.
  18. 실리콘밸리의 그림자: 벤처캐피탈, 인권, 실사의 부재, 2023. 12. 13.
  19. 프레데터 파일: 그룹에 걸리다, 2023. 10. 9.
  20.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 틱톡의 감시망에 걸리다, 2023. 11. 7.; 어둠으로 내몰리다: 틱톡의 '포 유(For You)' 피드는 어떻게 자해와 자살 충동을 조장하는가, 2023. 11. 7.
  21. 일론 머스크 하의 트위터에서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및 인권 침해 표현이 급증하다, 2023. 2. 9.

# 세계인권현황

## 보고서

지역별 인권 현황 개요



#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 및 LGBTI의 권리에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 태국에서는 고문 및 강제실종을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형선고 의문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의 인권 전망은 여전히 어두웠다.

미얀마에서는 무력 분쟁이 격화되어 더욱 많은 민간인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특히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아태 지역 전반에 걸쳐 반대 세력에 대한 불관용이 눈에 띄게 심화되었다. 인권 옹호자, 정치 활동가, 언론인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 및 조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었고, 불의에 반대하는 시위는 불법적인 물리력으로 탄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수 종교와 소수 민족, 소위 '낮은' 카스트, 여성 및 소녀, LGBTI, 선주민에 대한 오랜 차별의 패턴이 지속되었다. 이들을 포함한 소외 집단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서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가장 먼저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아태 지역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인 보호 및 적응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 표현의 자유

다수의 정부가 미디어, 인권 옹호자, 야당, 정부 비판자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위협받았다.

몇몇 국가는 이미 극단적이었던 제한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언론인과 기타 미디어 종사자 등이 괴롭힘과 자의적 구금의 피해를 입었고, 더욱 많은 언론사가 폐쇄되거나 강제로 폐업하게 되었다. 미얀마에서는 언론인 등이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동적인' 사상에 관심을 보인 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등 시민 공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통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그 밖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제가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에서 도입되었다. 피지의 새 정부는 미디어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중 하나를 폐지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독립 미디어 중 한 곳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인도 정부는 중앙 금융 기관 및 조사 기관을 무기화해 언론사 및 인권 단체의 허가를 정지시키고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공무원이 공익에 관한 정보를 미디어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 부탄의 경우 세계 언론 자유 순위가 하락했다.

검열 및 감시 기술이 반대 세력 탄압에 사용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추가적 제한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고, 소셜미디어 기업이 특정 이용자들에게 신원 공개를 요구하면서 사생활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홍콩에서는 가혹한 국가보안법과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한 소요죄에 의해 도서, 음악, 소셜미디어,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 국제엠네스티는 베트남에서 국가기관 요원이나 이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이들이 소셜미디어 계정 수십 개를 표적으로 스파이웨어 '프레데터(Predator)'를 사용하는 작전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인권 옹호자,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해 스파이웨어 '페가수스(Pegasus)'를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견해를 밝히는 이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베트남 언론인 및 활동가는 '반국가 선전 확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해졌다. 몰디브에서는 언론인이 시위 등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해 영화 제작자, 출판 편집인 등을 조사했다. 태국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해 비판자를 기소했으며, 필리핀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이들이 근거 없는 수사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파푸아 독립에 대한 평화적 요구가 여전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되었다. 라오스에서는 인권 옹호자에 대한 위협, 자의적 구금은 물론 불법 살해, 강제실종 등의 오래된 패턴이 계속되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서는 언론인, 인권 옹호자, 정부 및 군 기득권 비판자 등이 자의적 체포 및 강제실종 피해를 입었다.

반대 세력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이 공고화되는 신호가 관찰되었다. 중국 및 홍콩 당국은 해외로 피신한 자국민을 포함하여 활동가를 잡아들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고 보상을 내걸고, 다른 국가에 이들을 강제송환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인권 옹호자 두 명은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귀국한 후 구금되었다. 베트남 당국은 유명 유튜버가 태국에서 납치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라오스인 인권 옹호자 한 명은 태국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각국 정부는 정당한 표현을 범죄화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법률 및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와 관련된 부당한 수사 및 기소를 모두 중단하며, 미디어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용의 신호가 일부 관찰된 피지를 제외하면, 아태 지역 여러 정부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 했다.

태국에서는 2020년 시작된 정치 및 사회개혁 집회 참여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까지 2,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형사 기소되었다. 2022년 중국 우루무치 아파트 단지 화재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코로나19 방역 조치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한 위구르족 학생은 항의 시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와 몽골 당국은 지속적으로 억압적 법률을 적용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제한했고, 한국에서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 공기업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얀마에서는 현재 수감된 아웅 산 수치 전 국가 고문의 생일을 기념하는 꽃 달기 행사 참여자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적법하지 않은 무력 사용으로 인한 부상과 경우에 따라 사망도 여전히 흔히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여성 인권 시위 등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화기, 물대포,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당국은 시위 금지를 시도했고, 시위 참가자에 대해 과도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국에서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 발생으로 이어졌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시위에 경찰이 고무탄, 실탄, 최루탄을 사용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 인도네시아, 몰디브, 네팔에서는 보안군이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물리력을 사용했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 역시 몇몇 국가에서 심화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유일 야당의 선거 참여 자격이 박탈되었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필리핀에서는 인권 단체 및 인도주의 단체 등이 금지된 공산주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거나 ‘빨갱이’ 몰이를 당했고, 이로 인해 해당 단체 회원이 근거 없는 기소, 불법 살인, 기타 인권 침해에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에 놓였으며, 노동운동 활동가 수십 명이 수사를 받았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 인권 옹호자의 활동은 존중 및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에 우호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인권 옹호자, 정치 활동가, 환경 활동가 등은 정부 정책과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은 민족적, 종교적, 기타 정체성을 근거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 그리고 무슬림이 대다수인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자의적 구금 및 불공정 재판이 계속되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2만 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 놓였으며, 심각한 불공정 재판이 계속되었다.

파키스탄 당국은 5월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 체포에 따른 시위 관여자 4,000명 이상을 공공질서유지조례(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dinance) 및 모호하게 작성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를 포함한 민간인 103명이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인도에서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언론인 수 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용하거나 구금 취소 명령을 내렸지만, 잠무 카슈미르와 기타 지역에서 인권 옹호자는 계속해서 재판 없이, 많은 경우 수년간 구금되었다.

몽골에서는 절차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영장 없는 체포가 다수 이루어졌다. 각국 정부는 정부 비판자 등에 대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을 모두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는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이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 불처벌 및 사법에 대한 권리

불처벌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피해자에게는 정의, 진실, 배상에 대한 권리가 계속해서 부정되었다.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마약과의 전쟁’ 기간 불법 살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재개 결정으로 수많은 피해자 유족들은 일부 희망을 얻었지만,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했다. 태국에서는 보안군이 저지른 불법 살인에

대해 불처벌이 만연했다. 스리랑카 및 네팔 정부는 자국 내 무력 분쟁 기간 발생한 국제법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 수만 명에 대한 정의, 진실, 배상에 있어 또 다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 및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를 공정한 재판에 넘겨 불처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 조사 및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전적인 협조가 제공되어야 하고, 역사적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인도법 위반

미얀마에서는 전국적으로 군 및 군과 연계된 민병대의 무차별, 표적 공습 및 지상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국제인도법 위반이 계속되었다. 또한 무장한 반정부 집단이 미얀마 군사 정권과 연계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탈레반에 대한 무력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판지시르 지방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강제되고 생포된 국민저항전선(National Resistance Front) 대원들에 대한 초법적 처형이 자행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한편 이슬람국가 호라산(Islamic State of Khorasan Province) 등 무장 단체에 의한 공격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및 민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무차별 또는 직접 공격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몇몇 국가는 여전히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오스와 파키스탄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폭등으로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절대 빈곤의 위험에 처한 스리랑카에서는 특히 일용직 노동자 및 타밀족이 식량, 의료, 기타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에 일상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며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반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보건의로 시스템의 만성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에 접근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식량 부족이 계속되었으며, 필수 의약품 및 예방 접종을 포함한 보건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강제퇴거 및 주택 철거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 및 극빈층이 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앙코르에서 1만 세대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가 계속되었다. 인도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델리의 비공식 주거지 철거가 진행되어 3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었으며, 마을 간 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로 주로 대부분 무슬림 소유의 주택, 업소, 종교 시설에 대한 철거가 계속되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퇴거 계획 및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반대 시위에 나선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물리력으로 대응했고, 라오스에서는 댐 건설로 인해 수많은 마을 주민이 적절한 보상 없이 이재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전역에서는 티베트인 및 위구르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화 정책 등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소수 민족의 문화권, 언어권, 교육권이 침해되었다.

각국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정책이 식량, 보건의로 및 생존에 대한 권리 침해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업 책무성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했다. 미얀마 군의 민간인 공습에 사용된 항공유와 관련된 몇몇 기업이 더 이상 항공유 공급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영국, 미국, 기타 국가는 이와 관련된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표적 제재를 실행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는 기업 행위자의 인권 실사(due diligence) 수행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도입하여 기업과 그 파트너의 활동이 인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또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가 구제되도록 해야 한다.

## 종교와 신념의 자유

종교 및 신념의 자유는 특히 남아시아에서 여전히 위협을 받았다. 인도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폭력 및 위협 행위 수백 건이 보고되었다. 파키스탄에서도 아흐마디교 묘지가 훼손되고, 신성 모독 혐의로 하루 만에 소수 종교의 교회 20곳이 공격당하는 등 소수 종교에 대한 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시아파, 시아파 하자라족, 시크교, 힌두교, 기독교, 아흐마디교, 이스마일파 등의 소수 종교를 극도로 탄압했고, 이슬람 수니파 교리만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각국 정부는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차별 없이 온전하게 보호, 증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정책적 개혁을 포함하여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여성과 소녀의 권리

일본에서는 형법상 강간의 정의가 비동의 성관계까지 확장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다. 피지에서서는 결혼한 여성의 선거 참여에 대한 법적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하지만 아태 지역의 많은 여성 및 소녀는 여전히 체계적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

특히 남아시아에서는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포함한 다수의 괴롭힘 및 폭력이 계속해서 보고되었고, 책임 규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인도에서는 지배적 카스트가 불가촉천민인 달리트(Dalits) 아디바시족(Adivasi), 쿠키족(Kuki) 여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성폭력을 자행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차별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및 소녀의 권리가 어느 때보다 극도로 제한되고 인권 침해의 규모가 커지면서 반인도적 범죄인 젠더 박해(gender persecution)의 정도에 이르렀다. 네팔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동등한 시민권이 부정되었다. 부탄, 피지, 일본 등지에서는 공식 및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매우 낮았다.

각국 정부는 여성 및 소녀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성차별 및 교차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을 종식하고,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LGBTI의 권리

LGBTI 권리의 경우 진전과 후퇴가 모두 있었다. 대만 당국은 국제 동성 커플 대부분에게 결혼할 권리를 인정했다. 태국 의회는 12월 21일 동성 결혼 합법화 절차를 개시했다. 홍콩, 네덜란드, 한국 법원의 판결에서는 동성 커플 및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되었다. 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합헌으로 유지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LGBTI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에 항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에서도 잘 알려진 LGBTI 단체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등 LGBTI 개인 및 단체의 불안정한 상황이 잘 드러났다. 파키스탄에서는 정치 단체 및 이슬람주의 단체가 카와자사라(Khawaja Sara)라고 불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기존의 법적 보호를 위협에 노출시켰고, 이는 트랜스젠더 및 다양한 젠더의 시민을 상대로 한 폭력과 괴롭힘을 증가시켰다. 인도 대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거부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LGBTI 생활 양식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도서와 기타 매체가 금지되었으며, 몽골에서는 LGBTI 권리 지지 집회가 금지되었다.

각국 정부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는 등 LGBTI를 차별하는 법률 및 정책을 폐지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며, LGBTI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 및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 선주민의 권리와 민족 및 카스트 기반 차별

선주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민족 및 카스트에 기반한 차별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선주민의 토지의 상업적 착취로 선주민의 삶과 생계가 위협을 받았지만 선주민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피해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선주민 활동가는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선주민 환경 보호 활동가 두 명이 강제실종되었으며, 선주민 권리 운동 지도자는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었다.

호주에서는 의회에 선주민 대표자를 직접 내세우게 하는 ‘보이스(Voice)’라는 기구를 설치하는 국민 투표가 부결되면서 선주민의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무산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이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차별 및 소외가 계속되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기반한 차별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각국 정부는 민족 및 카스트에 의한 차별의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촉천민, 선주민, 기타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포함한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

피해자와 인권 옹호자의 캠페인 저력으로 태국의 고문 및 강제실종은 범죄화됐다. 그러나 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았다.

아태 지역 여러 국가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다수의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구금 중 사망도 너무나 흔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는 최소 94명, 말레이시아에서는 최소 13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 네팔 당국은 여러 건의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 중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공개 태형도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군은 아동을 포함한 파푸아 선주민 민간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고문, 구금 중 사망에 책임이 있었다.

각국 정부는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범죄화해야 하며,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시의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파괴적 홍수, 폭염,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아태 지역이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 현상에 취약함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탄소 배출 감축과 이를 위한 대비 및 적응 조치는 여전히 대부분 충분하지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이다.

5월에는 사이클론이 미얀마를 강타하면서 로힝야족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는 2012년 강제이주 이후 계속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인도에서는 히말라야 지역 홍수, 우타르프라데시주 및 비하르주 폭염으로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후변화로 초래된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어, 특히 빈곤층과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건강이 큰 위협을 받았다.

최대 탄소 배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 완화 노력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C 이하로 억제하기에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다. 각국의 정책과 행동은 자신이 약속한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만은 정부의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화석 연료 사용 중단 일정이 수립되지 않았고 석유 탐사가 계속되었다.

아태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석탄 의존도가 감소하는 신호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정부는 각국 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와 석탄 채굴을 승인했다. 일본은 공업국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전 부문 탈석탄을 공약하지 않은 국가였다.

각국은 채굴 산업이 환경, 선주민, 기타 피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적으로 무시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는 고비 지역의 채굴 활동이 유목민의 건강과 생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과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가 발생했던 금광에 대해 해당 업체의 대처가 충분치 않았음에도 채굴 재개를 승인했다. 아태 지역의 공업국과 기타 대규모 탄소 배출국은 화석 연료 생산 및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앞장서고, 지구 온도 상승 1.5°C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정책을 세워야 한다. 각국 정부는 재난 대비 및 적응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외 집단 등의 보호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및 인신매매

난민 및 비호 신청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은 호주 및 한국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난민, 비호 신청자, 이주민에 대한 보호는 아태 지역 전체에 걸쳐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인권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다수의 난민 및 이주민은 열악한 이민 구금 시설 등에 자의적으로 무기한 구금되거나 적절한 주거 및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2022년 이민 구금 시설에서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하여 150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해당 시설의 상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난민촌에서 발생한 화재와 사이클론으로 인해 수많은 로힝야족 난민이 또다시 노숙자가 되었다. 태국에서는 난민 및 비호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심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무기한 구금 또한 계속되었고,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위구르족 남성 두 명이 사망했다. 일본의 새로운 이민법은 난민 및 비호 신청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했으며, 대만의 이민법 개정에서는 강제송환 방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10월 파키스탄 정부는 미등록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1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대다수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탈출했던 49만 명 이상의 난민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말레이시아 역시 미얀마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책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기만적 수단, 그리고 주로 폭력적 협박을 포함한 강요에 의해 사이버 사기 및 불법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는 비호 신청자를 이민법상 지위를 근거로 구금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제적 보호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도 박해나 기타 인권 침해를 겪을 수 있는 곳에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 방지는 강화되어야 하고, 생존자에게는 안전한 경우 본국 송환을 포함하여 법적, 기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형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일곱 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아태 지역에서는 종종 국제법 및 국제 기준을 위반하면서 사형제가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사형 관련 통계는 여전히 국가 기밀로 분류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규정된 투석 등의 방법에 의한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유엔 기구의 보고가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로 여성 1명을 포함 여럿이 처형되었으며, 사형제 반대 활동가 및 변호사는 괴롭힘을 당했다.

사형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 인권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10세밖에 되지 않은 아동도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두 국가에서 모두 청소년 구금시설이 아동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00명에 가까운 아동이 형사 기소되었다. 그중 한 남성은 16세였던 2020년 당시 국왕을 풍자하는 패션쇼 퍼포먼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에서는 아동 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이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각국 정부는 아동이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최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을 위반한 아동에 대해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아동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세계인권현황

## 보고서

국가별 인권 현황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에는 실패했으나,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채택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계속됐다.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및 여성폭력 예방·대응 예산 삭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획을 이어가면서 여성인권 신장은 더욱 약화되었다. 정부는 노동 활동가 및 장애 활동가를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더욱 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배경

8월 서울에서는 약 5만 명 시민이 운집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규탄하는 평화시위를 벌였다. 이어 9월에는 약 3만 명 시민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행진에 참여했다.

##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4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등 다른 기술로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는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해당 법령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과소 설정으로 미래세대에 불평등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

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계속되었다.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은 2022년 처음 국회에 회부되어 2023년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정부가 ‘불법’ 시위를 단속하는 가운데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계속되었다.

1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대상으로 약 6억 145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장연이 장애인의 지하철 접근성 미비에 항의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및 손실에 대한 것이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휠체어 경사로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기타 이동 수단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열차에 탑승하는 시위를 반복해 왔다.

9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이적(利敵)’,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여러 번 법의 심판대에 올라온 이 법은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또한, 9월 헌법재판소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풍선 등을 통해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 노동권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한층 거세졌다. 지난 한 해 경찰은 노동조합원 수십 명의 활동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급습했다. 1월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5월 1일 노동절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양희동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고 이튿날 사망했다. 그는 건설회사를 '협박'해 노조 전임비 지급 및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5월 31일 양희동의 분향소를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4명이 다쳤다. 그리고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평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 차별

### 여성과 소녀의 권리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불러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나, 부처 폐지는 연말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8월 24일 서울에서는 일주일 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여성 강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10월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발표하여 여성인권 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8월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는 정부가 임신중지 권리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1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낙태죄를 비범죄 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LGBTI의 권리

2월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김용민 씨의 동성 파트너 소성욱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소 씨를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보험 시스템이 동성 파트너에게 사실상 관계로 인정되는 이성 파트너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시했다.<sup>1</sup> 이에 건보공단은 상고하였다.

5월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연합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혼인평등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정부에게 '가족'의 정의를 확장할 것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검토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말까지 아무런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92조의6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다.<sup>2</sup>

##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구금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추방 대상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구금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 절차가 부재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나, 법적

공백 발생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 밝혔다.

## 아동 인권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에 의한 출생 신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적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 성과 젠더 기반 폭력

1월 26일 법무부는 여가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법적 정의를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검토 계획을 발표한 같은 날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여가부가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게 했다. 현재 한국에서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는 동의 여부를 강간의 기본 구성 요건으로 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사형제

연이은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사형 집행 재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월 대검찰청은 영아 살해 및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 유통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8월 법무부 장관은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고등법원 승소, 혼인평등에 대한 희망 보여, 2023.02.21.
2. 국제엠네스티, LGBTI 군인에 대한 현재 결정은 안타까운 인권 후퇴, 2023.10.2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미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던 표현의 자유는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거나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아동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은 계속 보고되었다. 정부 정책은 지속적인 식량 불안을 야기했고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다. 정부 비판자를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자의적 구금이 계속 이뤄졌으며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주민의 생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배경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2020년 1월부터 폐쇄된 북한의 국경이 8월 중국을 오가는 여객 열차, 버스, 그리고 항공기 운항과 함께 부분적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였고 국경 경비대가 탈북을 시도하는 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대응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군사 장비와 탄약 등 북한과 러시아 간 화물 이동이 관측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으로 군수 물자를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생존권' 담보와 '전쟁 억제'를 위한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 표현의 자유

정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가혹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갔다. 정부는 통신 채널뿐만 아니라 국내외로의 정보

유출입 등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했다.<sup>1</sup>

‘반동사상문화’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영화, 책, 노래 등을 포함한 ‘반동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콘텐츠를 보고 읽거나 듣다가 적발된 자는 수년에 이르는 로동교화형에 처해졌으며, 이를 유묘하는 행위에 관여한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해졌다.

1월 18일 정부는 ‘한국식(괴뢰식)’ 말투를 ‘쓸어버리기’ 위해 새 법을 채택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거나 유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규정한다. 이 법 제58조에 따르면 “괴뢰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것을 만든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만약 범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증가한다.

만약 아이들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거나 ‘한국식’ 말투를 따라 할 경우 부모 역시 이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식의 처벌을 당할 수 있다. 이 법은 사회안전기관과 같은 관련 법기관이 공개 체포, 공개 재판, 공개 처형 등을 통해 한국식 언어와 문화에 ‘오염된’ 사람들의 ‘기를 꺾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3월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들이 처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강제 노동

강제 노동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 기관은 건설업, 광업, 농업 및 기타 주요 경제 부문에서의 운영을 위해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강제 동원을 계속 이어갔다. 노동에 강제로 동원된 이들에게는 극히 적은 대가가 주어졌다.

건설 현장과 탄광에서 강제 아동 노동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계속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강제적인 아동 노력 동원은 학교와 ‘청년동맹’ 등 가입이 의무화된 청소년 조직을 통해 이뤄졌다.

국가의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노동자가 파견되었다. 유엔이 인 터뷰한 다수의 전직 해외 노동자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임금 대부분을 국가가 취하는 것을 포함한 저임금 실태 등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술했다. 또한, 이들은 광범위한 감시 아래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으며, 안전 및 보건 조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휴식이나 쉬는 날 없이 장시간 근무해야 했다고 말했다.

## 식량권

한국의 여러 연구 기관은 2023년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불안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상당수 인구가 충분하지 못한 식량 섭취와 식품 다양성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식량 불안의 원인은 정부 경제 정책 및 만성적인 농작물 생산 부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주민들의 식량 및 기타 기본 육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군사비 지출을 우선시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꺼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sup>2</sup>

강력한 국경 통제로 인해 식량 밀수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북한 주민 다수가 이용하 는 장마당에서 식량 및 기타 필수 물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 건강권

건강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보건의로 서비스와 필수 의약품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말 북한과 중국이 철도 화물 운송을 일시적으로 재개한 후 북한으로 백신이 전달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를 위한 백신은 공급이 부족했다. 3월 유니세프(UNICEF)는 '따라잡기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35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15만 명 이상의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전국적인 재고 부족으로 인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와 같은 질병에 대한 완전 면역에 필요한 3차 접종 백신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이뤄진 것이다.

## 자의적 체포와 구금

헌법과 형법, 기타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었다. 당국의 눈 밖에 나가거나 동료 시민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이 만연했으며, 정부는 반대파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남용했다.<sup>3</sup>

여러 곳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나, 당국은 그 존재를 계속 부인했다.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사람 중에는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자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여성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탈북하는 사람에 대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범죄자'나 '반역자'로

간주한다. 과거 복송된 사람들은 자의적 구금에 처해졌고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영문판 중국 내용 참조).<sup>4</sup>

- 
1. 북한인권: 악화되는 인권 상황,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2023.02.07.
  2. 북한인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방치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3.03.17.
  3. 60+ Voices - 북한에서의 일상을 돌아보다, 개정증보판, 2023.10.31.

# 세계 인권 현황

## 보고서

2024년 4월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세계 인권 현황을 기록한다.

이번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보편적 자유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및 무장 단체는 전쟁법을 어기고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몇몇 무력 충돌과 이에 대한 대응의 중심에는 인종 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 위기, 기후변화, 환경 파괴는 소외된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역 사회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는 반대 의견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의 일환으로 타깃이 된다. 여성과 소녀, LGBTI 권리에 대한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일부 인종화된 소수 집단에 대한 선동과 기타 유해한 콘텐츠가 온라인에 게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편, 인공지능의 발전은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연결하고 미래를 위한 함의를 고대하며 2023년 155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 및 기타 행위자에게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들이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정부 지도자, 정책 입안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그리고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필독서이다.

[amnesty.or.kr](https://www.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

